

우리의 뉴노말 (New Normal) - 그 본질과 처방 -*

조 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1. 뉴노말 (New Normal)

1) 뉴노말의 생성 과정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의 역사상 아주 특수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시대의 이름은 <뉴노말 (New Normal)>이라고 한다. 뉴노말의 특징은 글로벌 경제의 모든 나라에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고부채 등의 상태가 정착되어 있고, 이에 대처할 방향은 어떤 나라도 아직 확실하게 잡지 못하고 있다. 이름은 ‘New Normal’이지만, 사실 이 시대에는 normal한 것은 없다. 지난 반세기 동안 연속적으로 일어난 abnormal한 사태가 만들어낸 abnormal한 시대가 오늘의 시대이다.

어느 시대의 어떤 형상이든, 아주 우연한 것은 없고, 다 그것을 만들어낸 역사적 배경이 있다. 뉴노말에도 역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자본주의의 본산인 미국경제가 1970년대부터 인플레이와 국제경쟁력의 상실로 침체하기 시작한 것이 뉴노말의 도화선이었다. 그것으로 인해, 80년대의 <신자유주의>의 도입, 90년대의 <신경제>정책과 <globalization>, 그리고 그때에 채택된 금융의 자유화가 미국경제의 금융화(financialization)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2008년의 <금융위기>를 불러왔다. 금융위기에 대한 처방으로 <양적완화; quantitative easing(QE)>라는 미봉책이 등장했다. 응급조치(應急措置)로 채택한 QE는 6년이나 계속되었고, 2014년의 경제지표의 호전을 계기로 기준금리의 인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경기침체는 계속됐다. 사실 기준금리의 인상으로도 그 침체가 종지부를 찍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나는 보고 있다. 미국의 실업률은 줄었으

* 본 원고는 2016년 2월 17일(수)~18(목)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된 201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둘째날 제2전체회의의 기조연설(아시아연구소 2층 210호)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나, 실물부문의 회복은 아직도 없는 상태여서, 고용의 증가는 일용(日傭) 근로자의 고용증가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전 재무장관 쉘머즈(Lawrence Summers) 교수가 주창하는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는 어떤 배경으로 어떤 미래를 상정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미국경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간헐적으로 황금시대처럼 보인 때도 있었으나 지금도 장기침체를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미국경제에 첩첩이 쌓인 불균형, 불안정, 불공정의 구조가 거의 정상화될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다.

Globalization의 시대가 지나가고 나니, 이제는 G-1, G-2, G-20도 없고, 소위 global standard도 없는, 모든 나라가 각기 따로 圖生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미국도 영국도 나 홀로 가고 있다. 전에는 여러 나라가 연결돼(coupling)있던 것이 이제는 decoupling되어, 제각기 따로 갈 길을 가고 있다. 뉴노말은 各自圖生의 길을 찾는 것이 normal하게 됐다는 것을 말한다. 반면 90년대 영미의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는 지금도 유령(spectre)처럼 자본주의 세계에 出沒하고 있다.

뉴노말 시대는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대이다. 어제까지 잠잠하던 일본은행에서 마이너스 기준금리가 채택되었다. 오늘 조간에는 한국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8.5%가 감소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이다.

2) 뉴노말의 원인

회고하면 1990년대 전반 미국이 경제의 금융화(financialization)를 허용한 것은 무리한 정책이었다. 경제가 그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경제에게 그것을 강요한 것이다. 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신경제’나 globalization도 지속될 수 없는 무리한 정책이었다. 미국은 왜 이런 정책을 추진했는가? 미국경제는 금융화에 비교우위가 있다고 보고, globalization으로 세계의 지도력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으로 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여기에서 잠시 멈춰서, 왜 이런 연속적인 정책의 무리가 나왔는가를 생각해 보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80년대 이후로 역대 미국정부가 <치국(治國)의 원리, 즉 治道>를 몰랐기 때문이다. 치도를 안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에도 치도에 따른 민주주의가 있고, 그것과는 거리가 먼 민주주의도 있다. 영국의 민주주의가 성공한 것은 역대 지도자들이 치도에 따른 민주주의를 실천했기 때문이다.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Weimar Republic)이 실패한 것은 治道에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사실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서도 20세기에 와서는 治道에 따른 민주주의를 실천한 지도자는 제32대 대통령 Franklin D. Roosevelt (1882-1945)밖에 없었다. 그의 New Deal 정책은 당시 미국 국민의 정서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治道를, 탁월한 그의 리더십으로 현실정치에 구현했다.

그는 「잊어버려진 사람들(forgotten men)」을 다시 국정의 기초로 삼겠다는 선거공약을 그대로 실천하고, 자기 이익만 쫓기는 20년대의 정신(generation of self-seekers)를 폐기하여, 미국의 전

통적인 공동체 지향적인 상부상조(相扶相助)의 가치관을 부활시켰다. 국민의 신뢰가 국정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신념을 끝까지 지켰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고 한 대통령 취임사의 말대로, 용기를 가지고, 빈부 격차를 줄이고 나라가 필요로 하는 물적·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했다. 미국식 복지국가를 만드는 많은 New Deal제도의 법률을 제정했다. 이러한 일들은 현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치국의 도리 - 治道>일 것이다. 루즈벨트는 이 治道를 실천함으로써 미국을 개조했고, 사후에도 2차 대전의 승리와 전후 세계 리더십의 안목을 길러서, 자유세계의 번영 시대를 열었다.

요약해 보자. 루즈벨트는 우선 국민, 특히 밑바닥의 서민을 사랑한 높은 덕성을 기초로, 빈부의 격차를 줄여서, 분배의 균형을 잡고, 국민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용기와 신념으로 나라를 개조했다. 이런 것들이 그의 治道였다. 나라마다 치도는 다를 수 있지만 루즈벨트의 治道는 참고가 될 만 한 것이 많다.

1970년대부터 미국이 신자유주의를 도입하여 오늘에 이르는 동안 루즈벨트의 New Deal은 완전히 一掃되었다. 그 후 반세기동안 역대정부가 채택한 일련의 정책은 모두 治道에 어긋나는 것이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2008년 금융위기를 맞은 미국 연준(Fed)이 통화량의 양적완화 정책을 쓴 것은 밀어닥친 위기를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緊急避難)이었다. 2008년 말부터 2014년 10월까지 만 6년 동안이나 이 정책을 계속 쓴 것은 부득이한 일이었다. 미국 행정부는 아무런 가시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경제정책은 연준에만 의존했고, 연준은 QE에만 의존했다. 경제이론가들이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연준은 2015년 11월 실업률이 줄어서, 경제가 회복됐다고 보고 기준금리 0%를 0.25%인상하여 0.25%로 올렸다. 미국경제가 일단 고용을 회복했다고 본 듯하지만, 경제가 정상화됐다고 볼 수는 없다.

경제의 부진과 아울러 사회, 교육 등도 추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버드 대학의 Robert D. Putman 교수의 近著 *Our Kids -- The American Dream in Crisis*, 2015 에서는 1970년 초를 분계선으로, 경제와 아울러, 가족관계, 사회, 교육 및 그 밖의 모든 부문이 크게 변했는데, 대부분 上向보다는 下向행진을 함으로써, American Dream이 위협해졌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가 다 어려운 뉴노말 시대를 겪고 있다. 중국도 어렵사리 뉴노말 시대를 기회로 만들고자,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가지고 애쓰고 있다. 유럽 경제는 더욱 말이 아니다. 위기가 꼬리를 물고 있다. 앞으로 EU가 어떻게 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내렸다.

한마디로 뉴노말 시대는 글로벌 자본주의 경제의 시련기이다. 미국이나 EU나, 뉴노말의 문제는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가 아니라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로부터 일어난 것이다. 정부의 실패원인은 어디에 있었는가. ‘정부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지도자의 시계(視界)가 항상 눈앞의 득실만 보고 원시적(遠視的) 비전(vision)이 없기 때문이다. 보다 크게는 내가 위에서 말한

治道에 어긋나는 정부정책이 너무 오래 지속된 때문이다. 이것은 세계경제가 제대로 회복 될 날은 아직도 멀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2. 한국의 뉴노말

1) 국산 뉴노말의 본질

한국경제는 한국 특유의 뉴노말이 있다. 전과 다른 새로운 세상을 만난 것이다. 과거의 세상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정부나, 기업이나, 국민이나 빨리 새로운 시대 - <국산 뉴노말> - 의 본질을 알고 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의 관념은 거의 과거의 그것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을 보아도 거의 새로운 발상은 없다. 이 시대의 治道를 못 찾고 있는 것이다.

<국산 뉴노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1)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의 추락을 말한다. 최소한 4%라고 하던 성장잠재력은 해마다 떨어져서 작년의 성장률은 2%대로 떨어졌다. (2) 정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고, (3) 사회의 갈등과 분열은 더욱 심해졌다. (4) 국민의 풍기(風紀)는 퇴락(頹落)해서 인간으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패륜(悖倫)사건이 연속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 문화의 질이 야만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다. 나라의 品格, 즉, 국격(國格) - 사람에 人格이 있듯이 나라에는 國格이 있다 - 이 추락하고 있다.

2) 뉴노말 극복의 기본 발상

(1) 뉴노말 극복: 정부의 책임과 그 혁신

이런 <뉴노말>의 참담한 양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본 원동력(prime mover)은 정부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구각(舊轂-옛 껍질)을 벗어 던지고 참신한 발상으로 전반적으로 국정을 쇄신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자면 우선 정부 스스로가 달라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래로 3년 동안 사심 없이 청렴결백하게 국정에 전념해 왔다. 그것은 국민이 다 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비상시에는 청렴결백만으로는 부족하다. 박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언급한대로 국가개조(nation rebuilding; 나라 다시 만들기)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심기일전하여 국민을 상대로 治道에 따른 ‘정치’를 해야 한다. 새로운 발상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지지를 받자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고 신뢰를 얻자면 국민의 이해를 얻어야 한다. 불신과 분열에 찌든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국민을 설득하여 이해와 지지를 받고, 나아가서는 국민이 정부정책에 대한 기대를 걸게 만들어야 한다. 治道에 맞는 정치라면, 당장에 국민의 호응을 받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다. 많은 시일과 인내가 필

요하다.

이탈리아의 속담에 ‘고기는 머리부터 썩는다’라는 말이 있다고 알고 있다. 이것이 부조리의 속성이다. 우리의 경우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나라의 상층부분의 부조리의 그물(綱-그물망)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아래로 내려 퍼지기는 쉽다. 국영기업체, 공공단체 등에 대한 인사, 특히 낙하산 인사가 가장 많은 부조리의 형태이다. 治道에 맞는 정부운영을 하자면 우선 이것부터 근절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뉴노말은 대부분 지난 날 우리의, 특히 역대정부의, 근시안적인 관념의 결과이다. 우리는 개발연대의 성공으로 이룩한 <한강의 기적>과, 민주화 운동의 성공으로 일구어낸 대통령 직선제 - 즉 <민주주의의 성취>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다.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 낸 재벌 대기업만 잘 되면, 경제의 모든 다른 문제 - 이를테면 중소기업의 부진, 소득과 부의 분배의 불균형, 인구 노령화 문제 등 - 는 저절로 다 잘 풀린다고 속단했다. 경제와 민주주의만 잘 되면, 나라의 모든 다른 부문의 문제는 저절로 잘 해결된다고 속단했다. 역대정부가 대체로 비슷하게 治道에 어긋나는 생각을 했다. 그것이 끝내 <국산 뉴노말>을 불러 왔다.

우리는 글로벌 뉴노말의 영향도 많이 받고 있지만, 그 영향은 우리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다. 국산 뉴노말은 우리의 능력으로 극복해야 한다. 국산이라고 만만히 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국산 뉴노말을 극복한다면, 글로벌 뉴노말이 거세더라도 두려울 것이 없다.

(2) 국산 뉴노말 극복의 과제

우리의 뉴노말을 극복하려면 구체적으로 국산 뉴노말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경제 분야와 경제외의 분야로 나누어서 논의하고자 한다. 경제 분야 뉴노말의 장애요인은 다음 몇 가지이다.

첫째, 경제발전에 불가결한 요인에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선, 중소기업의 미약한 체질과 내수산업의 부진을 들 수 있다. 이 문제의 최선의 해결책은, 앞으로 우리의 젊은이들이 기술을 배워서 왕성한 창업(創業)정신을 발휘하는데 있다.

둘째, 대기업, 중소기업을 불문하고 기업의 경쟁력 - 과학기술력 및 경영능력 - 의 혁신이 부족하다. 그 때문에 고용, 특히 청년 고용이 매우 부진하다. 과학 기술의 이노베이션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의 조직이나 제도도 시대의 흐름에 뒤지지 않게 혁신되어야 한다. 우리의 대기업도 좀 더 적극적으로 기술혁신과 경영혁신을 일구어내야 한다.

다음, 경제외적인 분야에 나라발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이 매우 심각하다. 한국의 정치, 교육, 사회, 문화 등이 모두 기능장애(機能障礙; dysfunction)에 걸려 있다. 이것이 부메랑(boomerang)효과를 가지고 와서, 지금은 경제의 기반조차도 짓누르고 있다. 우리의 治道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이제는 엄청난 경제발전의 장애요인을 만들어냈다. 교육, 정치, 사회, 문화 등 나라의 기반이 되는 부문에 새로운 혁신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앞으로 경제발전의 동력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3. 혁신의 기본방향

혁신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에 있어, 창조와 파괴의 바람이 거세게 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 바람이 너무 약해서, 발전의 동력이 꺼져가고 있다. 세간에는 ‘Dynamic Korea’라는 말이 유행하여, 한국은 변화의 동력이 강한 것처럼 알려지기 쉬우나, 사실은 전혀 다르다. 우리 사회에서는 social mobility가 매우 약하다. 한국의 30대 재벌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차이가 없고, 중견기업이 상향 이동한 것도 거의 없다. 한국은 dynamic한 사회가 아닌 것이다.

1) 중소기업은 경제의 기반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중소기업, 내수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경제의 기반이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가장 절실한 것은 기술을 갖춘 젊은 이들의 활발한 창업이라고 나는 본다. 그렇게 하자면,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를 많이 설립하고, 좋은 교원을 확보해야 하며, 졸업생들을 수련하는 master도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 육성을 채소에 물주고, 거름 주듯 할 수는 없다. 젊은이에게 기술을 가르쳐서 창업할 용기를 가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날의 중소기업정책은 유명무실한 것이 많았다. 실패한 원인은 그 정책의 추진이 잘못돼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산하의 관련 기관이 자기들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 ‘유망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이 정부지원의 거의 전부였다. 중소기업의 전통이 없는 나라에서, 이런 ‘정책’을 쓰는 것은, 문서에만 남고 실체가 없는, 처음부터 성공하기를 바라기 어려운, ‘육성정책’이었다.

지금과 같은 정보화시대, 지식기반을 가진 수준 높은 기술 시대에는 상당한 기술력과 경영능력을 구비한 젊은 사람이 중소기업을 창업하지 않고는, 중소기업은 성공하기 어려우리라 생각한다. 그렇게 하자면, 많은 분야의 과학기술을 익히고, 연구·실험하는 실리콘 벨리나, 중국의 중관촌(中關村)같은 곳이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에서 진정한 첨단 기술이 나와야 하고, 세계를 상대로 운영되는 기업이 나와야 한다. 중소기업의 육성은 과거 대기업 육성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심분 인식하여야 한다.

2) 경제외적인 ‘나라의 기반’에 대한 정책

정치, 교육, 사회, 문화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상론할 겨를이 없다. 여기에서는 나라의 기반인 교육에 관해, 개괄적으로 개혁의 기본방향만 제시하고자 한다.

나는 앞으로 우리나라는 경제를 비롯하여 모든 국가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경제, 교육, 정치, 사회, 문화 등 국가 정책을 제쳐놓고, GDP와 수출의 증가를 나라의 최고목표로 삼아왔다. 국민도 그것을 기준으로 정부의 업적을 평가하였다. 교

육은 한때 <제2의 경제>라고 불렸다. 이런 반지성적이고 治道에 어긋나는 정책이 우리의 뉴노말을 불러왔다. 이런 정책이 쌓이고 굳어져서 우리의 후진을 <인간절벽>위에 서게 하고 있다. 젊은 이들이 ‘3포’ ‘5포’ ‘N포’를 포기하여, 연애, 결혼, 출산을 마음대로 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청춘을 포기하다니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국민이 돈의 노예가 된 때문이다. 기성세대는 진심으로 반성해야 한다.

이 나라는 앞으로 사람을 아끼고 젊음의 소중함을 알아서, 사람을 잘 가르치고, 가르친 사람을 잘 쓰고, 노년이 되면 잘 보살펴야 한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을 아꼈 줄 모르고, 나라의 기반을 만드는 교육은 교육부 공무원에 일임하여, 분별없이 4년제 대학을 대량 인가하여, 사회가 필요로 하지 않는 ‘고급’인력의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모든 힘을 다해야 한다. 한글 전용을 폐지하여, 한자(漢字)를 마음대로 배우고 쓰도록 해야 한다. 학교의 평준화를 폐지하여, 학교지원을 자유화해야 한다. 대학의 학사운영은 대학에 일임해야 한다. 기업 운영은 기업에 맡겨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대학운영은 교육자에 일임해야, 나라의 지성이 향상된다. 이것이 학문에 관한 治道이다.

교육의 내용과 제도를 개혁하여,人材를 잘 길러서 고용을 늘리고, 가족을 복원하여 國風을 바로 잡는 것을 뉴노말 극복의 ‘패러다임’으로 삼아야 한다. 교육의 목적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것은 돈을 버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人材를 기르는데 있다. 교육을 돈의 노예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人材라는 말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한다. 인재라는 말은 ‘유명한 인물’, ‘높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일이든 자기에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인물,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인물을 말한다. 장차관, 국회의원, 판검사 등은 물론이고, 청소부, 아파트 수위, 지하철 역무원 등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똑바로 해내는 사람은 다人材이다. 사회는 장차관 못지않게 청소부, 역무원을 필요로 한다. 그런 의미의人材를 기르는 것, 사람의 덕성, 책임의식, 감성을 높이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돼야 하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문화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경제 발전의 목적이 돼야 한다. 정치를 잘 하여, 국민의 정치의식을 높여서 그들의 선택의 질을 높이는 것이 정치의 목표가 돼야 한다.

사람을 위주로 한다? 잘 납득이 안 가는가? 우리나라의 자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 사람 밖에 없지 않은가? 경제성장과 수출증가를 외치면서, 국민 능력의 향상을 등한시하다니, 바보 같은 이야기가 아닌가? 경제도, 정치도, 교육도, 사회도, 문화도,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가?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은 사람의 질이 높아져서 그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정치가 좋아진다는 것은 사람의 수준이 좋아져서 그들이 뽑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 국민의 질은 좋아지고 있는가? 작년(2015년) 9월 4일자 『매일경제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다보스의 ‘세계경제포럼(WEF)’은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2000년대 초에는 세계 11위였는데, 2014년에는 26위로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국가경쟁력’을 정확히 무엇으로 측정한 것

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동안 그만큼 추락한 것은 우리 국민의 수준의 정체(停滯)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람을 위주로 하여, 제대로 된 리더십을 가진 정부가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정책을 운영하는 것, 이것이 古今東西의 모든 나라의 성쇠(盛衰)의 관건이었다. 지금의 자본주의 문명이 추락하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 문명의 가치관이 돈만 알고,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전혀 배려를 하지 않는데 있다. 개인의 생활은 그 사람의 책임이지, 국가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종전의 자본주의의 이념(理念) - 이것은 이제 어떤 나라에도 타당성이 없다. 어떤 나라 어떤 문명이든 그것이 활력을 유지하자면, 인간의 높은 이상과 왕성한 활동을 유도하는 길 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그리고 문화의 퇴락(頹落)도 정상화돼야 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다. 필요한 것은 治道를 아는 정부의 리더십이다.